

아침세평

박병진

금구초 교장·교육학박사



얼마 전 광주시교육청이 퇴직 예정 교원 대상 공로연수 도입을 교육부에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교원도 퇴직 전 연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렇게 하면 퇴직 교원의 사회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신규 교사들도 더 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처럼 교사단체와 노동조합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맞춤형 연수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교원들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제안을 환영했다. 공무원 퇴직 전 공로연수는 보통 정년퇴직을 1년이나 6개월 앞두고 퇴직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왜 공무원들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는 의견도 있고, 승

광주시교육청 ‘퇴직 전 교원 공로연수’ 추진 응원

진 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 전 공무원을 현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나쁜 정책이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 정책이다. 이 글은 정책의 장단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왜 교사들에게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는지 따져보는 글이다.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공무원 공로 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 1993년 도입됐다.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고, 보통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1년을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에는 6개월의 기간을 준다. 공로연수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퇴직 후를 준비하는 교육적 과정이다. 교육훈련기관의 합동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해야 한다. 또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민간 연수기관의 연수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기본급과 함께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직

후 자기 인생을 준비하게 해 준다는 점에 있어 아주 좋은 정책이다. 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에게도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교원들에게만 없을 뿐이다. 이는 평등권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교원들의 퇴직 준비 제도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더 먼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교원들에게는 3개월의 퇴직 준비 휴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87년부터 시작된 퇴직 준비 휴가는 2013년에 중단됐다. 이유는 주5일제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들의 퇴직 전 휴가는 사라졌는데,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로 연수제도가 새로 도입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퇴직 전 교원에 대한 공로 연수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서둘러 관련 법이 개정돼 퇴직 교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은 물론, 신규 교원 임용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r

기고

김동우

광주 남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의 역사이고, 공동체의 미래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백년대계를 다시 그려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경계가 반듯해진 토지로 인해 지가 상승, 개발 인허가 활성화,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낙수효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로, 당시의 미흡한 측량기술과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서로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곳곳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 건축 인허가 지연 등 행정적 불편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지적재조사, 땅의 경계를 넘어 사람을 잇는 일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우리 남구도 2013년 화장·월성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지석·압촌지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그동안 8381필지, 5132만㎡에 달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으며 토지의 법적·공간적 가치를 회복해 오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있었고 경계 협의 과정은 그야말로 갈등의 연속이었다. 당초 사업지구 지정에 동의했던 주민들조차 막상 구체적인 경계가 정해지는 순간에는 토지 면적 감소 또는 조정금 납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보이며 항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행정’이란 단순히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실감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와 소통이 중요한 사업이기에 “왜 지금 해야 하느냐”, “기준대로 두면 안되느냐”는 질문 앞에 측량된 결과를 설명드리고,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의견을 경청하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게 이어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확한 지적정보는 도시계획, 재개발, 재난 대응, 공공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며,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과 지연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또 정확한 토지정보는 토지 거래 활성화와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며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책임수행기관 시행을 계기로 민간 측량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결국 지적 정비는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남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상담,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다지고, 신속한 행정 절차와 공정한 기준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경계를 함께 바로 세우고, 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독자투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

큰 건물을 거닐다 보면 건물 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물며 화재가 발생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까지 가려진다면, 출구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때 비상구의 표지판이 장애물로 인해 보이지 않는다면, 파난은 불가능해지거나 장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 지속적인 소방검사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및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파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지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화와 협조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비상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이승환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OPINION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사설

1년 내내 ‘5월 전남 방문의 달’만 같았으면

전남도가 여행업계 위기 극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5월 전남 방문의 달’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한다. 한 달 동안 무려 788만명의 방문객이 전남을 찾아 역대 5월 최대 관광객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는 ‘방문의 달’ 시행 직전인 지난 4월(601만명)보다는 187만명(30%), 지난해 5월(730만명)보다는 58만명(8%) 늘어난 수치다. 도내 곳곳에 관광객이 넘쳐났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공식기록에 집계된 5월 전남도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520만대로, 4월보다 무려 110만대(27%)나 많았다고 한다. 당연히 도내 19곳에서 열린 축제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79만명,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 15만 2000명, 함평 엑스포공원 17만명, 담양 죽녹원 12만4000명, 목포 해상케이블카(9만6000명) 등 주요 관광지 방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기간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25만명(20%) 늘어난 159만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전남도의 공이 크다. ‘방문의 달’을 맞아 숙박·위케이션 빈값 할인, 관광지·체험시설 입장료 할인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남도 미식로드 탐방, 남도 정원 산책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별여행상품·코스도 새롭게 선보였다. 또 젊은 층과 유튜버들이 선호하는 뽐지 순례나 영화·드라마 촬영지 투어도 운영해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열린 이벤트를 진행한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의 경우 5월 신규 가입자가 5503명, 월매출은 2억9700만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2.3배, 5.2배 늘었다고 한다. 또 특화 여행상품을 운영한 39개 여행사도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2만900명을 모집해, 5월 한 달 동안 2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절마다, 아니 매달 풍성한 혜택과 특별한 관광상품을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많은 방문객이 전남을 찾아 남도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말이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공적 추진 기대

나주시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단계 지원대상에 선정됐다고 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종합평가에서 1단계 사업 성과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기관을 거점 삼아 인근 지역을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R&D) 배후 공간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8월 과기부가 지정한 나주 강소특구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공기업형 특구다. 나주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12억원을 투입, 한전과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기술 핵심 기관, 나주 혁신산단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구개발 배후 공간으로 육성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지능형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기업의 연구·개발과 강소형 창업육성 사업이 추진돼 기술이전 143건, 연구소와 기업 24개 설립, 창업 69건, 신규 일자리 471개 창출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여기에 한전 보유 기술에 기반한 태양광, 신재생 운영·유지보수, 에너지저장 수요 기업 맞춤형 기술이전 또한 활발해지면서 3560억원 규모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한다. 나주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은 보다 실질적인 기술 실증과 기업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기로 했다. 지역산업 연계 및 한전 2050 R&D 마스터플랜, 탄소중립 기술 전략을 토대로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기술 발전 및 연계 안정화, 차세대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에너지 전환 시대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술 실증 구축 체계 마련과 에너지 특화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의 연계 R&D,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으로 전국 강소특구간 협력과 지역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나주 강소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